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7. 3. 3.(금)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최성준 위원장**
- 2017년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지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에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2월 28에 있었던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의결사항

가. 광역시 및 평창·강릉 일원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7-09-044)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광역시 및 평창·강릉 일원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광역시 및 평창·강릉 일원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역시 및 평창·강릉 일원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15년 7월 700㎒ 대역 주파수를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배정하고, ’15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공동으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6년 9월 지상파 UHD 국가표준이 결정되었고, ’16년 11월 11일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을 허가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규허가 대상은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일정에 따라, ‘현재 HD 본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광역시 및 평창·강릉 지역 18개 방송국’입니다. 자세한 신규허가 대상 방송국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신규허가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신규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상파 UHD 방송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서비스인 만큼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인지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UHD 방송이 신규로 도입되는 방송서비스로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경영·기술적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10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위촉 기준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자,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인 자 등입니다. 결격사유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의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 2014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의 자문 또는 용역을 수행한 자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입니다.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심사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안)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임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 결정,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 평가, 필요시 신청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의견제시 등입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입니다.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5대 심사사항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도록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항목의 배점 비중을 높였습니다. 심사항목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허가 여부 결정기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 또는 '허가 거부'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허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항목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17년 5월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17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말 허가 관련된 내용을 의결하고 방송사업자에게 신규허가 심사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표>를 보면 신규허가 대상 방송국에 평창·강릉 일원에는 MBC와 G1(강원민방)밖에 없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KBS 춘천·원주 등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실험방송 형식으로 UHD를 송출한

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KBS가 정식 허가가 늦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이것이 2015년 저희가 정책방안을 만들 때 협의된 내용입니다. 당시 KBS 같은 경우 구체적인 안은 아직도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국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통폐합 또는 구조적으로 지역국의 이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UHD를 현재 있는 방송국에 도입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일단 춘천·원주지역은 광역시 평창단위에서 KBS는 하지 않고 2020년경 시·군단위 할 때 같이 신청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시청자들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고 하는데 메이저 방송사가 방송을 일단 실험방송 형식으로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커버리지는 다 수신되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본방송과는 다른 것은 한번 방송을 하면 쭉 가겠지만 실험방송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서 올림픽 기간 전·후로 해서 그 기간 동안 제작은 아마 주로 본사 KBS 서울 중심으로 제작된 것을 송신소만 강원도 지역에서 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의 품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도달거리도 지금 수도권에서 쓰는 임시장비를 활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춘천·원주 강원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시청하는데 불편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G1 같은 경우 지역민방인데 KBS나 MBC에 비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사정이 열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HD 시설 장비 도입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독자적으로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지, 계획서는 아직 안 받아봤지만 그런 고충이 예상되는데 혹시 의견 들어본 적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물론 당연히 방송사 쪽에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시에 정책방안을 만들 때 원칙을 세운 것 중 하나가 '송출장비, 송신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 때와 동일하게 방송사 자체비용으로 한다'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 다만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일단 시설과 또 장비를 도입하는 데는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 무리가 없어 보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지금 수도권과 달리 송신장비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작장비들도 많이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곧 보고드릴 예정인데 수도권에서 나온 수중계를 과거 디지털 전환 때와 동일하게 UHD 프로그램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지역방송 같은 경우에는 당장 제작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할 부담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방송도 물론 지역민들을 위해서 더 해 주어야겠지만 강제적인 부담은 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심사를 아직 시작하기 전이니까 그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의결해 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들과 좀 더 협의해서 신청서 내기 전에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7월에 그 결과를 내놓으면 방송은 몇 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 12월 예정이기 때문에….

○ **김석진 상임위원**
- 12월 예정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김석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광역시와 평창·강릉, 쉽게 말해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중앙에 있는 Key사 3개 지상파 외에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KBS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재원, 그다음에 운영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영상황을 보면 MBC만 해도 계열사이기 때문에 자칫 지역사에 모든 부담들이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지역민방으로 가면 더 큰 우려가 있는 것

입니다. 서울의 Key사인 SBS와 지역민방들은 전혀 별개사입니다. 여기에 법적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송중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만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는 것입니다. MBC나 지역민방,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송중계망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텐데 1개사당 커버리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겠지요. 이번에 대략 어느 정도 투자금액이 예상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제가 투자금액은 정확히 아직 사업계획을 받지 못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꼼꼼한 고 과장님께서 그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그것을 파악해 보십시오. 이것이 특성이 다릅니다. KBS와 그다음에 계열사 체제인 MBC,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지역민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을 감안해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MBC나 특히 지역민방들 같은 경우 Key사의 UHD 시스템 구축과 운영 노하우 이런 것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겠지요.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G1민방에 대해서 김석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G1 같은 경우 자본금이 160억원밖에 안 됩니다. 아주 열악하지요. 아마 지역민방 중에 자본금 규모가 가장 작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고배당을 매년 해서 지난 재허가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유보금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기에 또 걱정되는 것이 이번에 대주주 변경 신청을 해 왔지 않습니까? 오너십과 경영권이 확립되어 있다면 이 기간에 UHD 이렇게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큰 우려가 안 되는데 그럴 것 아닙니까? 오너가 바뀌고 그에 따라 경영진들이 바뀌게 된다면 일관된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기가 혹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는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의 문제나 그리고 이후 정부정책에 따라서 G1이 UHD 본방송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또 그와 관련해서 회사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 시에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G1 심사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계획서에도 공적책임 부분에 UHD를 하겠다고 심사계획서에 들어간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심사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의문 나는 것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KBS, MBC, SBS를 우리가 UHD 방송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총국들은 독립적인 방송사업 법인이 아닌데 부산KBS, 광주KBS 광역KBS 총국들에 대해서도 따로 허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지상파는 전파법에 따라서 방송국 단위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재허가 할 때도 방송국별로 허가장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워낙 방송국이 많다 보면 사업자들을 묶어서 하기는 하지만 허가장의 기본은 방송국별로 되어 있습니다. 무선시설을 운용하는 방송국에 허가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왜냐하면 KBS 자체 내부 문제가 아니고 방송국 단위로 다시 또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다음에 이것이 2017년 7월부터 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내년 2월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광주KBS, 광주MBC, 광주방송이 UHD 방송을 송출하는데 그러나 전주방송국, 순천방송국 그 시청권에서는 UHD 방송을 못 보는 것이네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현재 시·군단위는 2020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우리는 지금까지 정책목표라고 할까,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UHD 방송으로 세계 최초로 하겠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국내 시청자들도 다 못 보는 것이네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물론 다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지역방송사의 재정 상황들을 고려해서 일단 광역시 먼저 도입하게 되면 전 국민의 70% 정도가 평창올림픽 당시의 UHD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시청자 70% 정도가 UHD 방송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리고 이로부터 2년 뒤에 시·군단위 기초 단위까지 다 할 수 있게 확산되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2020년부터 21년 2개년 동안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나머지 시·군지역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결국 IOC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UHD로 중계방송한다고 채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계 각국 UHD 준비상황을 보면 시청권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다른 나라들로 보면…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UHD가 많이 확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지만 그래도 또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UHD 시장이 많이 확산되어 있어서 OBS에서는 지금 평창을 UHD로 중계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아직 정식 채택이 안 됐는데 하여튼 우리로서는 방송기술과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또 세계 최초로 한다는 의미도 있고 해외시장의 방송산업 진출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70% 정도면 국내 시청자들에게도 상당한 무료 보편 서비스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차질 없이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김 국장님은 마이크 켜놓고 있는데 답을 할 기회가 없네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 **이기주 상임위원**
- 지난번에 수도권 UHD 운용 개시일자 조정하면서 민관합동으로 점검반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은 되고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지난주에 점검단을 구성했고, 지난주 1차 회의를 했고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타임테이블이 들어간 체크리스트를 협의해서 완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거기 멤버 중에 국책연구기관이나 교수들도 들어가 계십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역시 그리고 평창·강릉 쪽으로 확대하는데 나중에 사업계획서 접수를 했을 때 그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실현가능성, 타당성, 현실성,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두루 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구성할 때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수도권 UHD 문제 때문에 쭉 팔로우업을 한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저는 광역시 확대되는 경우에 기술적으로도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재원 문제도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방통위 입장에서는 어쨌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UHD가 잘 순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허가 심사의 차원이 아니고 지금 수도권 서비스 개시함에 있어서 겪고 있는 그런 레슨(lesson),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계획 낸 것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실현가능한지,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을 정말 잘 검토해서 허가 심사와 실제로 서비스 개시함에 있어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과거 어느 심사보다도 이번 UHD인 경우에는 잘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 하시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일단 지금 저희들이 구성한 점검단이 5월 31일까지는 서울·수도권 지역에 UHD 방송을 하는데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는 광역시 단위의 UHD 방송국을 개국하고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자문을 하고 조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 허가 및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경험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광역시권과 평창·강릉 일원에 지상파 UHD 방송 허가도 그 이후에 실제로 예정된 일정대로 잘 방송될 수 있도록 계획 실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조언과 또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일정에 의하면 7월에 심사하고 5월에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앞서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의 절차를 쭉 진행해 오면서 한국에서 축적한 여러 가지 경험들, 또 지금 준비상황 점검단에서 체크를 하면서 나타나는 사정들을 이런 광역시권과 평창·강릉 방송사들과 공유하면서 그들이 신규허가 신청서를 낼 당시부터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 또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세심하게 점검이 되어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오도록 챙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런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심사도 하겠지만 미리 계획 자체가 과거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실현가능한 것, 또 장비 같은 것들도 이제 Key사 3사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또는 사양들에 대한 것들이 경험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공유가 되어서 철저하게 실행 여부가 검증된 계획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협의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KBS의 경우 평창·강릉 일원과 관련해서는 명칭은 실험방송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는 본방송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그런 품질의 방송을 한다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만, 그 시기를 평창·강릉 일원의 MBC강원영동, 원주MBC, 그다음에 G1은 현재 허가를 받으면 지속적으로 쭉 해야 하는데 KBS 춘천·원주는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올림픽 기간 동안만 하기 때문에 실험방송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지, 방송의 품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내용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3기 방통위에서 UHD 관련해서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달 내에 안건 올라 올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EBS UHD 신규허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반기에 EBS가 UHD 본방송을 실시하려면 2월까지는 신규허가를 내주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했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KBS와 EBS 협의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중재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중재는 저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고, 현재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양사 간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재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수신료 배분비율, 그때 위원들께서….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하여튼 다음 주나 빠른 시일 내에 티타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시행령 개정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제3기 위원회 때 UHD 관련된 정책방안이 확정됐고 지상파 3사는 본방송 일정까지 확정이 됐는데, 또 다른 중요한 공영방송인 EBS의 UHD 본방송 일정이 확정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로 넘기기 전에 최소한 기본방향, 대책 이런 것들은 확정하고 갈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곁들여서 EBS 문제도 그렇고 아까 제가 끝머리에 그냥 넘어왔습니다만 기초 시·군단위에 거주하는 시청자들에게 2년간의 UHD 격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지상파가 무료 보편 서비스인데 준비상황상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정책에 따라서 국민들 간에, 시청자 간에 격차가 발생하고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채널간 EBS 같은 중요한 교육방송의 허가가 지연됨으로써, 물론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불평등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가능한 그 격차를 줄이고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건다고 할까, 열심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KBS와 EBS 사이의 문제는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해결이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안을 보고받지 못했지만 제3기 위원회 안에 그 안이 보고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예고까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구의 지상파 UHD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시·군·구에 지상파 UHD 방송을 할 수 있는 주파수가 현재 확보가 되어 있지 않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3단계는 채널 재배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채널 재배치를 통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주파수를 만들어 내면서 점진적으로 UHD 방송 허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런 작업도 큰 로드맵을 잘 세워서 차근차근 체계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EB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저희 제3기 마지막 보고안건으로 처리가 되기를 제안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지금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말씀이 뒤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고, 저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하는 안이 보고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 **최성준 위원장**
- 최소한 저희가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입법예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2017-09-045)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방송공사 등 14개 지상파(TV, 라디오, DMB)방송사 147개 방송국과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허가 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총 21개사 154개 방송국입니다. 자세한 방송국의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허가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고자 합니다. 재난·재해 발생 빈도와 그 피해가 점증함에 따라 재난방송 적합성이 높은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는 재난방송 공적책무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청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사업자 제출 자료 검증을 위한 현장실사, 사업계획 실현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대표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지상파 TV·라디오, DMB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일괄 실시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별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11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공동체라디오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 절차는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재허가 여부, 재허가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임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을 세분화한 심사기준 및 그 배점 결정,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 평가 및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필요시 신청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의견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사항 및 배점입니다.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별 배점은 사전 기본계획을 따르되, 지상파방송의 공적책무로 재난방송 실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심사사항(대분류)의 <6>번이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인데 거기에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배점을 50점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점이 1,050점이 되는데 이 1,050점을 다시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허가 여부 결정에 대한 기준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하게 됩니다.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재허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입니다. 보고드린 내용을 의결해 주시면 '17년 5월 말 재허가 신청 공고를 하고 6월 말에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서 11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11월 중으로 재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의결하고 심사결과를 사업자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는 <1>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과 <2> 지상파DMB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관련 논의 경과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표현이 조금 그래서 그런데 심사기본방향에 '지상파TV·라디오, DMB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일괄 실시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별도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상파, DMB 방송에 대한 심사위원회와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각각 꾸려서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이지, 다른 별도로 특별히 진행한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각각 운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마치 뭔가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어서….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지난번 DMB 재허가를 할 때 위원회에서 앞으로 지상파와 DMB를 같이 통합하자는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정리된 내용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공동체라디오사업자가 7개 사업자인데 공동체라

디오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심사를 받습니까?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방송법상 지상파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정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체라디오 같은 경우는 유독 3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령에서 지난해 규정 완화 차원에서 그것을 바꿔 놓아서 5년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긴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3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공동체라디오는 규모가 굉장히 영세한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파 도달거리도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종사자 수도 평균 몇 명 정도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렇게 많지는 않고 상시 인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명, 3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대부분 재능기부 형식으로 시청자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방송시간도 24시간 할 인력이 안 될 텐데 몇 시간 정도 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사업자마다 다 다른데 정확한 시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보통 10시간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런 영세한 규모의 지역공동체라디오를 3년에 한 번씩 거창하게 심사위원단을 꾸려서 지상파방송과 비슷하게 그런 격식을 갖춰서 한다는 것이 조금 격에 맞는지, 간편하게 심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실태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정규방송과 차이 없이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별도로 꾸린다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지상파와 공동체라디오는 같은 전파를 쓰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여러 가지 규모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각각 운영할 예정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혹시 공동체라디오에 시청자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또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제가 알기로는 저희 쪽에 직접적으로 제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심사를 받는 것도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이런 것이 일반 정규방송 지상파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번 기회에…, 지금 공동체라디오 7개 사업자가 3년마다 한 번씩인데 몇 번째 심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4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본방송이 됐기 때문에….

○ **김석진 상임위원**

- 10년이 넘어가는 방송들인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사무처에서도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도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송법 내에 포괄되다 보니까 방송법과 일반 기존 큰 방송사업자와 유사하게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아까와 같이 재허가 기간이 다른 방송사업자는 기본적으로 5년까지 가능한데 공동체라디오는 3년으로 아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이런 제도개선할 부분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물론 심사위원회가 꾸려지면 그런 것이 다 자세히 점검을 받겠지만 재정적으로도 취약할 것 같습니다. 광고를 해서 운영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광고도 허용되어 있지만 사실상 광고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평균 1억원 정도로 상당히 열악해 있고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매체가 다양화되면서 1인 방송 시대라고 감히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TV 같은 경우도 생중계하는 1인 방송 시대인데 라디오도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검토가 있어야겠다, 너무 엄격하게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실정에 맡게끔 손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붙임 2>에 지상파DMB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관련 논의 경과를 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동안에 제3기 때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세부심사 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지상파 TV·라디오, DMB, 공동체라디오방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심사 기준이나 평가지침을 각각 따로 만들 수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공동체라디오는 배점 자체가 이미 다르기 때문에….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은 아는데 5페이지의 심사사항과 배점 그 위에 ‘세부심사 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붙임 2>에 보면 ‘지상파DMB방송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2014·2015년 재허가 시 방통위 의견’이라고 해서 지상파DMB에 대한 현안 진단과 서비스 지속 여부를 포함한 근본적인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연구 주요 내용에 보면 지상파DMB의 사업성 부진의 원인, 그중에는 DMB사업의 선순환 구조 확보 실패, 미디어시장 환경 변화 이런 부진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이라고 일곱 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지만 사업부진의 원인이나 개선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업부진의 원인은 아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라서 아주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개선방안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개선방안을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방통위 의견에 근본적인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지만 저도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계속 문제가 있어서 연구해 보자고 하면 자꾸 발전시키고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쪽으로 연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원인이나 개선방안을 놓고 보면 발전 방안, 활성화 방안 이것 연구만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렇게 해 놓고 계속 발전방안을 만든다고 하고 재허가하고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보면 2014년 재허가 시 의견 중 심사위원회 의견에 첫 번째 ‘다만,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등 재정 확보 측면 등에서 일부 보완 필요’ 저는 이때 제가 참여한 것 같은데 ‘다만, 일부 보완 필요’ 이런 표현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아주 일부 이것만 보완이 필요하면 된다는 뉘앙스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도개선 방안연구라고 전파진흥협회를 통해서 하는 연구내용을 봐도 출력증강이나 주파수 재

배치나 공적지원 어느 것 하나 제가 봐서는 법적·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개선방안 연구는 저는 실효성 측면에서 대단히 곤란하다, 그래서 제 결론은 아까 세부심사 기준이나 평가지침을 만들 때 지금 두 가지 매체에 대한 문제점이나 과거의 연구결과를 봐서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그것이 반영된 평가지침, 세부심사 지침이 마련되어서 재허가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임>으로 들어간 이 두 가지 논의 경과는, 하여튼 아주 진지하고도 심각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통신이든 방송이든 서비스나 매체나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있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해 봤지만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성적으로 계속 활성화 방안, 발전방안만 연구를 하는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활성화 방안, 발전방안 연구결과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활성화나 발전되기가 지극히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두 가지 문제는 앞으로 심각하고 진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지상파DMB나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경우에 저희가 지난번 심사위원회 때 검토된 것, 또 별도의 연구용역을 줘서 검토한 것 등을 보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지금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지상파DMB의 경우에는 지금 지상파 UHD 방송이 되면서 이동형 HD가 가능해졌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DMB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되어 나가야 되는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지상파DMB 방송사업자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까지 해 오던 방송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일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재허가 신청을 받겠지만 아마도 다 재허가 신청을 해서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인위적인, 제도적인 정책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적절한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소출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 있는 것처럼 디지털 라디오가 도입이 된다든지 해서 다양한 채널 배치가 가능하게 되는 때가 오지 않으면 또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 재허가 때 방통위에서 의견을 낸 것처럼 이제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역할을 팟캐스트 같은 인터넷매체 또 1인 방송 이런 것들이 지금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정책방안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또 그와는 별개로 또 허가기간이 만료되어서 거기에서 재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재허가를 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서로 병행하면서 정합

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하여간 재허가 과정에서 오늘 논의된 내용, 또 이러한 각종 연구용역 결과에 나온 것들이 반영되어서 물론 운영할 수 있는 폭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겠지만 그 폭 내에서라도 이 지상파DMB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이라고 해야 할지 또는 그것을 정비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안들도 함께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심사의 기본방향에서 방송의 재승인·재허가 심사가 가장 중요한 방송평가 또 어떻게 보면 방송 개혁 감독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평상시에도 우리가 매년 방송평가를 하고 있지만, 심사의 기본방향에 보면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등 또 재허가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한다' 중점 심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 부분은 배점에 포함되어 있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번 종편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서는 이미 다 알려진 것처럼 방송의 공적책임과 기획·편성의 방향 두 항목에서 50% 이상을 못 맞으면 과락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다' 이렇게 유보적으로 하기는 했지만요. 그런데 그때 논의해 봤지만 이번의 심사 대상인 KBS, MBC, SBS와 다른 방송사들이 큰 방송사들인데 전국단위이기도 합니다. 과락제 도입은 안 하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2015년 위원회 논의 결과, 종편과 달리 지상파는 방송한지 오래 됐기 때문에 과락제를 일단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서 반영된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우선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논란이 심했던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적용했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중요한 지상파들에 대해서도 방송의 공적책임과 기획·편성의 방향 이런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분야에 대해서 과락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일단 이번에 재허가 심사를 해서 상황,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 지난번 재허가 점수와 비교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해 준 사전 의결 계획에 따라 하기 때문에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저는 평소에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재승인·재허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이나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이런 것들이 점수가 잘 나와서 공적책임이나 기획·편성의 방향에 문제가 있는데도 1,000점 만점에 650점이 넘게 되어서 계속 재허가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번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이런 문제들은 방송사업자들의 문제입니다. 방송 정책당국으로서는 방송이 사회적 책무, 공적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느냐, 기획·편성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느냐 하는 것이 중점사항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이미 <붙임 1>의 1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1,000점 만점 중에 400점이 방송평가이고, 방송의 공적책임과 프로그램 기획·편성 부분이 합쳐서 400점입니다. 600점 중에 400점이 이미 이쪽에 배점이 되어 있고 경영·기술적 능력은 100점, 그다음에 방송법령 준수 여부가 100점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이쪽에 많은 항목들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1차적으로 배점을 조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좀 더 2단계로서는 지상파 심사에서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항목에 대해서는 과락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지상파가 있고 또 그중에서 공영방송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KBS, MBC입니다. KBS는 완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나 수입구조로 봐서 수신료가 부족하다고 많이 주장은 하고 있지만..., MBC는 지배구조나 형태로 봐서 공영방송이지요. 그런데 수신료가 아니고 자신들의 광고수입을 통해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영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경우에 재허가 심사 대상 기간 중에 뉴스보도의 시청률이 그 전 수년 동안 평균치에 비해 월등히 떨어진다면 이것은 원인분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공영방송에 대한 감독정책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4년, 5년 동안에 특히 메인 뉴스 저녁 8시, 9시 뉴스의 시청률이 그 전에 비해서 심대하게 떨어졌다면 이것은 뭐가 문제인가를 원인분석을 해야 할 것이고, 주로는 방송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국민적 관심사, 시청자 이슈에 부응하지 못하고 뉴스가 계속 헛다리를 짚는다, 딴소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안 보는 것이지요. 외면하는 것이지요. 공영방송이 그렇게 시청자로부터 외면을 받을 때 방송 정책당국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평소보다 재허가 심사할 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책무와 함께 공정성·공공성의 의무,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를 제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심사할 때 기본계획에 이대로 해야 합니까? 고치면 안 됩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기본계획 자체를 건드려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은 이미 의결해 놓은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이미 2015년도에 기본계획은 의결되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기본계획 말고 세부계획에 심사위원회에다가 공영방송 예를 들면 뉴스보도의 시청률이 심사대상 기간 3년이나 5년 동안에 10년, 15년 평균치보다 현저히 떨어졌다면 그것은 심사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세부계획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과 시청자들의 요구, 주문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시청률을 반영한 적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시청률이라는 것이 반드시 프로그램의 질과 공정성을 비례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청률을 반드시 여기에 심사할 때 보자고 한 적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도·교양·오락 3대 장르가 있다면 교양이나 오락에서는 맞습니다. 시청률이 그 프로그램의 품격이나 질과 직접 상관성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뉴스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보도는 교양·오락과 다르지 않습니까? 콘텐츠 방송내용을 평가할 때 그것은 뉴스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뉴스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에 외면을 받는 것이고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뉴스보도의 시청률은 뉴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의 질과 뉴스의 품격, 뉴스의 품격이라는 말은 잘 안 쓰지요. 정확성이나 신속성이나 또는 이슈 정합성인데 국민들 관심사에 얼마나 부응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뉴스 평가의 기준이고 그 점에서 교양과 오락과는 평가기준이 다르지요. 그래서 메인 뉴스에 대한 시청률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계획이나 어디에 넣지 않더라도 심사위원들에게는 중점사항으로 전달되는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로서는 중분류 이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는 심사위원회에서 세부 항목과 배점을 정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사항은 충분히 전달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면 그 부분을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세부계획을 넣을 때 그 밑에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심사위원회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위원이 심사위원회에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정책을 시행해 오면서 규제당국으로 봐 오면서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본계획에도 중점적으로 본다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점적으로 보는 방법이 뭐냐고 제가 물어본 것인데 중점심사, 심사 기본방향의 두 번째 항, 그것은 중점심사라고 우리가 주문했으면 그 방법의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중점심사를 해 달라고 한 부분은 당연히 그 뜻이 심사위원회에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고 과장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중점 심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시청률, 비록 보도 프로그램이지만 시청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평가를 하라는 그런 세부적인 지시까지, 세부적인 의견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 세부심사계획에 담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될 때 심사위원회에게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끼리 논의해서 그 방법을 정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부계획에 그 내용을 담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기술적으로 검토해 봐야겠는데 여기 중점심사를 하라고 있는 두 번째 항에 보면 방송의 공적책임, 그다음에 시청자권익보호, 콘텐츠산업 발전 어차피 우리가 여러 대항목 중에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영방송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택해서 뉴스보도에 대해서는 봐야겠다는 것을 검토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는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뉴스의 시청률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선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뉴스 시청률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잣대가 되기는 어렵고 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률조사기관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어떤 것을 더 기준으로 잣대를 삼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시청률을 의식해서 뉴스의 논조를 그렇게 가져간다든가 하는 것은 대단히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소위 포퓰리즘인데 어떤 저널리즘이 정도를 가지 않고, 정론을 가지 않고 항상 시류에 편승해서 어떤 여론이 더 따라가는 그런 포퓰리즘식의 인기영합적인 시각으로 뉴스를 만들어 낸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가 그런 식의 여론 왜곡이 되지 않도록 엄격히 감시할 책무가 있다고 역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뉴스의 시청률에 연연해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대로 정도를 가겠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 회사가 갖는 예를 들면 어떤 방송국이 갖는 기본적인 뉴스에 대한 철학, 저널리즘의 원칙과 정도 이런 것이 그 방송사의 수뇌부가 어떤 공론화를 마련해서 내부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그 원칙은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우리가 권장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매체마다 다 논조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선진국도 다 어떤 매체든지 논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논조는 곧 시청자에게 그 논조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시청률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방송사의 자율적인 판단을 우리가 침해하는 것이고, 또 오히려 방송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봅니다. 모든 시류에 여론의 흐름에 왜곡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목청 큰 사람 또는 강력한 주장들이 오히려 침묵하는 대다수의 대중의 여론을 오히려 더 능가하는 것으로 잘못 오도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방송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지켜야 할 가치라고 본다면 그것은 방송사 자율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사가 우리 시청률에 연연해하지 않고 시청률이 낮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갖는 뉴스 철학대로 내겠다, 그렇게 해서 시청자의 판단을 받겠다, 선택을 받겠다 그것은 방송의 자율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정도로 해 주시고, 시청률 가지고 여기에서 계속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국장님 계속 조용히 앉아계신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영방송은 당연히 재허가를 해 주어야 합니까? 심사 때마다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공영방송은 무조건 재허가를 해 주어야 합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것이 방송정책국장으로서의 입장이 있고, 개인적인 소견이 있을 수 있는데….

○ 고삼석 상임위원

- 국장의 자격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국장으로서 입장은 당연히 공영방송사라도 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이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공영방송사로서 유지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허가 취소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정답입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한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방송법에 나와 있는 공적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때 공영방송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역할이 인정될 때, 정치적으로 보면 민

주주의 제도 운영에 기여할 때 공영방송은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공영방송의 존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번에 재허가 대상은 공동체라디오를 제외하면 14개 방송사 147개 방송국입니다. 물론 심사위원들께서 모든 방송사에 대해서 충실하게 심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방송사업자가 있는데 저는 단연 MBC다, 그리고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공영방송 MBC의 공영성과 공정성 확립을 통해 MBC를 정상화하는데 심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3기 방통위원회 운영하는 동안 정말 MBC 문제는 보도 문제뿐만 아니라 노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그리고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은 제 역할도 못하고 오히려 분란을 더 초래했던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법에서 보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명분으로 경영진들의 전횡까지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MBC 사장이 선출됐습니다. 여권 추천 이사들만으로 김장겸 보도본부장을 MBC 신임 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입장발표를 통해서 이러한 여권 추천 이사들에 의한 일방적인 사장 선출이 MBC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를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외향을 보면 다수결로 포장되어 있으나 소수 이사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배제된 채 여권 추천 이사들만으로 사장이 선출됐습니다. 아마 방통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이 이번 사장 선출을 계기로 MBC 내부의 극한 분열과 대립을 해소하고 화합과 통합의 계기로 삼기를 바랐는데 그러한 기대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또 27일 신임 MBC 사장이 MBC 본사와 계열사 그리고 오늘 내일 지역사 임원까지도 아마 결정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불공정 보도와 노조 탄압 등 MBC의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점들을 이번에 정확히 짚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본방향과 세부심사 기준을 보면 공적책임과 공정성 실현 여부,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정성 여부, 재허가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공영방송 MBC의 공영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도 되어 있고 이것이 세부계획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까지 종합적으로 2가지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방송평가 제도입니다.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가 400점 전체 배점의 40%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종편이나 보도PP 재승인 심사결과를 보면 평가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큰 방송사나 작은 방송사나 그리고 잘하는 방송사나 못하는 방송사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즉, 평가척도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체로 사업자들이 배점의 약 80에서 90%를 득점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80~90% 득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평가수단으로써는 신뢰성과 타당성 상실입니다. 우리가 대학교에서 학점 후하게 준다고 해서 문제된 적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 80~90% 학생들에게 A 줘서 한때 문제가 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신입사원

평가할 때 대학 학점은 안 본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3년 동안 여러 번의 방송평가, 그리고 허가·재허가 이런 것을 해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평가수단으로써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전에는 배점을 낮추어야 합니다.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는 배점을 낮추어야 되고, 또 사업자들의 실적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나야 합니다. 잘하는 사업자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고, 못하는 사업자들은 낮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너무 많은 방송사들을 다 하다 보니까 업무가 가중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합니다만 분명하게 상대평가라든가 정성평가라든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추후에 개선 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락 제도입니다.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고 우리가 기존에 심사 기본계획 논의할 때도 과락제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파·종편·보도PP, 또 지역민방, 신규사업자 이것에 따라서 과락제도가 여러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50점 미만이면 당연히 '재허가 불허' 또는 '조건부 재허가'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락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중점심사항목, 즉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공정성 실현 가능성,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적정성 이러한 것들이 종편 같은 경우 50% 미만이면 과락이지요? 그래서 재허가 불허도 가능합니다. 여타 항목들은 40% 미만인 경우는 조건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다릅니다. 앞에 지역의 UHD 허가할 때도 과락제도가 있습니다만 40% 해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지상파방송정책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 방송사 전체에 대한 심사 세부 기본계획을 검토할 것 아닙니까? 방송평가를 반영하는 부분들 그리고 과락제도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간단히 말씀하시지요.

○ 김재홍 부위원장

- 매우 중요한 대목에서 중요한 토론이라고 생각되는데 회의에서 토론시간을 많이 잡을 수 없지만 지금 고 위원께서도 MBC 특정 방송사, 특정이라면 공영방송은 2개 있는 것이니까, 메인 뉴스의 시청률과 관련해서 그것이 시청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개념과 결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이야말로 시간개념과 결합시키지 않으면 매우 서로 생각하는 것이 거리가 큽니다. 특정 상황에서 대중 인기에 부합했다는 것이 포퓰리즘인데 적어도 3년 안팎의, 5년 안팎의 기간 동안 뉴스보도 시청률이 일정하게 굉장히 밑바닥이었다면, 그 전에 10여년 이상의 평균 뉴스 시청률에 비교해서 하면 그것은 포퓰리즘에 영합하지 않아서 시청률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그 방송사 지도부, 수뇌부의 논조였다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 언론으로서 방송사의 독립성이라고 할까 논조는 시청자들의 요구와 관심에 저는 예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세계 대표적인 BBC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도 BBC 트러스트(BBC Trust), 시청자를 대표하는 기구가 최고의 경영감독기구로서 논조까지도 논의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영상업방송이 아니고 공영방송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 대상의 수년 동안의 뉴스보도 시청률을 분석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방송사의 독립성과 논조라는 말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적인 논조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방송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방송사의 자유와 독립은 시청자들의 그것에 예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사할 때 세부 항목에 넣는 방법과 심사위원회에 저 개인 상임위원이든지 상임위원 또 다른 2명이든지 전체 합의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중요하게 논의됐다, 토론이 됐다는 것이 전달되도록 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견과 또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견에 차이가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에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의 세부계획에 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시고 또 김석진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나중에 심사위원회에 그런 의견들이 전달되고 그다음에 보다 더 구체적인 심사방향,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과 관련해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과 그다음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평가점수가 50% 미달할 경우 조건부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 제3기가 2015년 4월 29일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의결할 때에는 그 부분이 없었는데 제가 한참 뒤에 검토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종편이나 보도PP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과락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상파방송의 경우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바로 사전기본계획을 다시 논의하자고 말씀드려서 그래서 몇 달 뒤에 기본계획을 다시 모여서 논의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김석진 위원님은 안 계셨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논의하는 과정에서 같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상파의 경우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방송을 운영해 왔으니까 같게 하는 것은 너무 실정에 맞지 않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논의를 한 결과, 그 2개 항목이 50%에 미달한 경우에는 조건부 재허가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아무 이의 없이 다 같은 의견이어서 그렇게 수정 의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이렇게 2015년에 미리 의결한 이유는 여기에 맞춰서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아마도 이번에 재허가·재승인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새로이 기본계획을 만들 때 그러한 논의들이 반영되어서 진정으로 두 항목에 대한 50% 미만의 경우에 과락이 필요하다면 또 그런 과락 제도를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새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정하거나 또는 세부계획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담기에는 여러 가지 과거의 예라든지 또는 이 세부계획의 성격에 비추어서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계획은 지금 보고된 대로 이렇게 의결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결론 내리기 전에 별도 발언이라기보다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렸습니다. 아까 MBC 재허가 세부계획 논의하면서 MBC가 재허가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엊그제 취임한 MBC 김장겸 사장의 취임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핵심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품격은 편향적 보도와 선정적 방송의 요구로부터 벗어나 저널리즘의 기본자세를 확고히 할 때 갖출 수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 앞에 더욱 겸손하고 팩트를 신중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나 강조하고 싶은 목표는 바로 젊은 방송입니다. 젊은 방송은 사고방식과 조직을 혁신하여 새롭게 혁신시키자는 것입니다” 또 뒤에 보면 임직원들께 당부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가 진영논리와 노사갈등에 매몰되어 있을 때 바깥세상은 빛의 속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몰되어 진영논리로만 해법을 찾는다면 미래를 헤쳐 나갈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MBC지요, 하나로 힘을 합치면 못해 낼 것이 없습니다. 시청자에게 행복을 주는 대한민국의 1등 방송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 함께 나갑시다” 신임 사장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임 김장겸 사장의 취임사를 보면서 액면 그대로 취임사를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30년 넘게 언론인으로서 살아오셨는데 취임사에 허언을 담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당부하건대 지금 MBC는 보수신문으로부터 여러 가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표현은 옮기지 않겠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촛불집회에서는 야유를 받고 있고, 또 반대로 보수단체에 가서는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방송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취임사에서 노사갈등, 내부 분열을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지난 4년 동안 MBC는 임단협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이 없어서 그렇지, 이것은 위법사항입니다. 새 사장께서는 열린 마음으로 노조와 대화해서 임단협부터 체결할 것을 권고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다음 회의는 3월 9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7년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05분 폐회 】